

제조물책임법과 안전규제의 효율적 조합에 관한 연구

양 덕 순* (가톨릭대학교 강사)

송 인 속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

어느 나라든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이들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전규제와 제조물책임법간의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방향을 정리하고,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우리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조물책임법과 안전규제간의 효율적인 조합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설문지 조사이다. 기존의 이론적 연구와 실증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실증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를 많이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조사자료는 인터넷조사로 킷라면, 원터치 캔, 세탁기, 전자레인지, 건전지, 락스 세제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서울시 또는 경기권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34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논의에 의하면 상품의 위해발생 가능성이 클수록, 상품 위험성이 잘 알려진 경우, 상품사고에 대한 소비자 부주의의 영향력이 클수록, 예상된 손해의 크기가 클수록, 소비자의 위해경고표시에 대한 행동이 둔감할수록 사전적 안전규제가 비교우위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첫째, 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거나, 예상피해 규모가 큰 상품군으로 식품, 가전제품, 의약·위생용품, 자동차·기계관련용품, 의류·장신구, 유아·아동용품, 개별상품으로 정수기, 전기압력밥솥, TV, 전기장판,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전자렌지, 조사대상 상품 가운데 원터치 캔 제품, 락스 세제의 경우 안전규제가 비교우위를 갖는다.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에서 정한 안전기준이나 경고표시를 사업자가 그대로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부주의로 상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에게 면책 내지 책임경감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규제기관과 법원의 이중적 적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고표시에 대한 반응수준이 낮은 우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제조물책임법보다는 안전규제의 비중이 조금 더 큰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본 연구는 제조물책임법과 안전규제가 별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 앞으로의 논의에 첫발이 될 것이며, 이론적 논의의 틀에 비추어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실증자료를 재구성, 재조명함으로써 안전규제와 제조물책임법의 효율적인 조합의 방향을 찾으려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안전규제, 제조물책임법, 경고결함, 경고표시, 상품사고